



환경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1. 1.(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12. 30.(금)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790)
		담당자	사무관 양종림 (044-201-6794)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 * 직접충격 소음(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
-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 * ①기존 48dB(43+5dB) → ②2023년 44dB(39+5dB) → ③2025년 41dB(39+2dB)
-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여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슬리퍼 착용으로 소음 줄이기, △층간소음 매트 활용하기, △혼자가 아닌 다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기

- 아울러 올해(2023년)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 층간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이웃사이센터+지자체

-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국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라며, “층간소음을 줄이고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2. 층간소음 민원 처리현황.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4. 층간소음 관리기관 설치 현황.
5. 질의응답. 끝.

붙임 1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 층간소음 범위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참고 : 층간소음 상담 세부 범위(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층간소음 대상 포함	층간소음 대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거나 뛰는 소리(아이, 성인) - 문 여닫는 소리 -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 망치 소리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충격·타격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 TV소리, 라디오,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소리(개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사람 육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음식 냄새 - 원인불명 소음 등

□ 층간소음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현행 → 개정)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 39	38 →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 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붙임 2

충간소음 민원 처리 현황

□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

구 분	1단계	2단계(현장진단)				
	전화상담 접수처리 (콜센터+온라인)	접수현황	처리현황			
			소계	추가전화 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계	289,425	76,211	75,574	56,669	16,172	2,733
'12년	8,795	1,829	728	351	377	-
'13년	18,524	3,271	2,620	1,396	1,224	-
'14년	20,641	4,465	4,617	2,789	1,747	81
'15년	19,278	4,712	5,000	2,477	2,364	159
'16년	19,495	6,306	5,741	3,380	2,158	203
'17년	22,849	9,226	8,576	6,170	1,997	409
'18년	28,231	10,142	10,294	8,058	1,817	419
'19년	26,257	7,971	9,654	7,447	1,745	462
'20년	42,250	12,139	11,608	10,711	714	183
'21년	46,596	9,211	9,891	8,412	1,088	391
'22년 11월	36,509	6,939	6,845	5,478	941	426

□ 충간소음 원인 유형('12~'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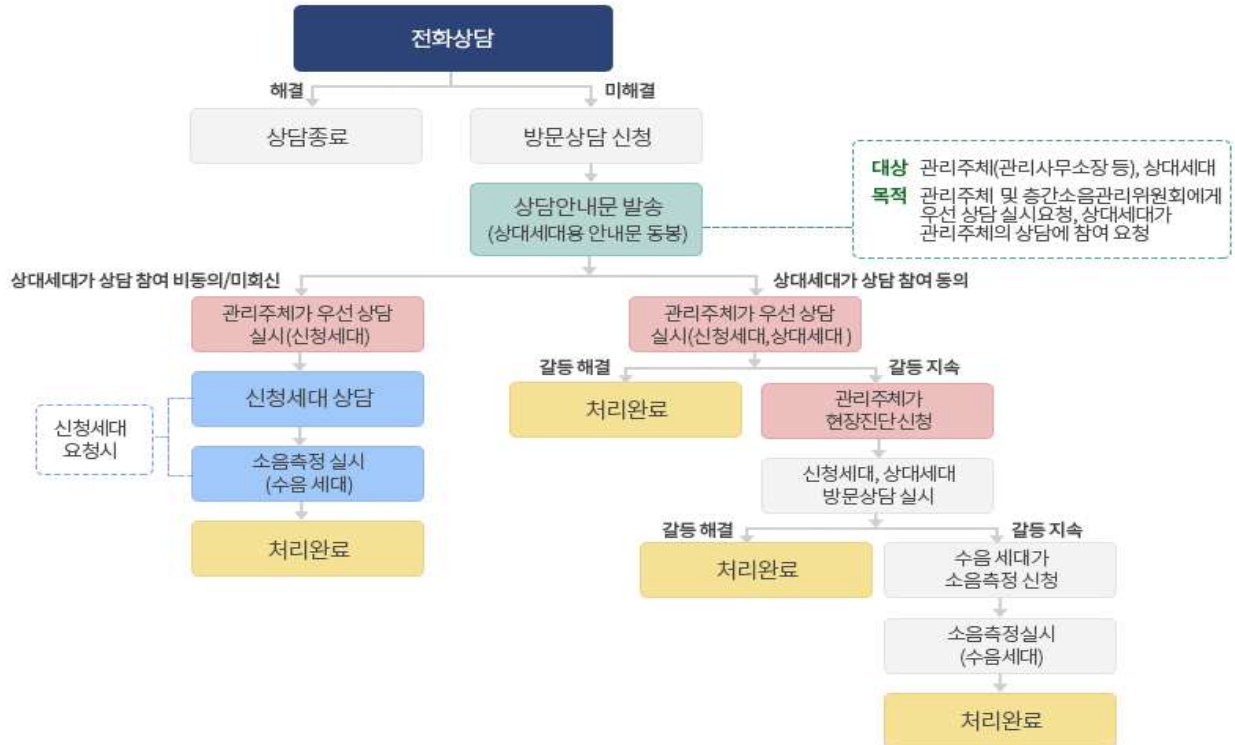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뛰거나 걸는소리	망치 소리	가구 끄는소리	가전 제품	문 개폐	악기	기타	소계
건수	46,897	3,247	2,674	1,928	1,404	1,019	12,103	69,272
비율(%)	67.7	4.7	3.9	2.8	2.0	1.5	17.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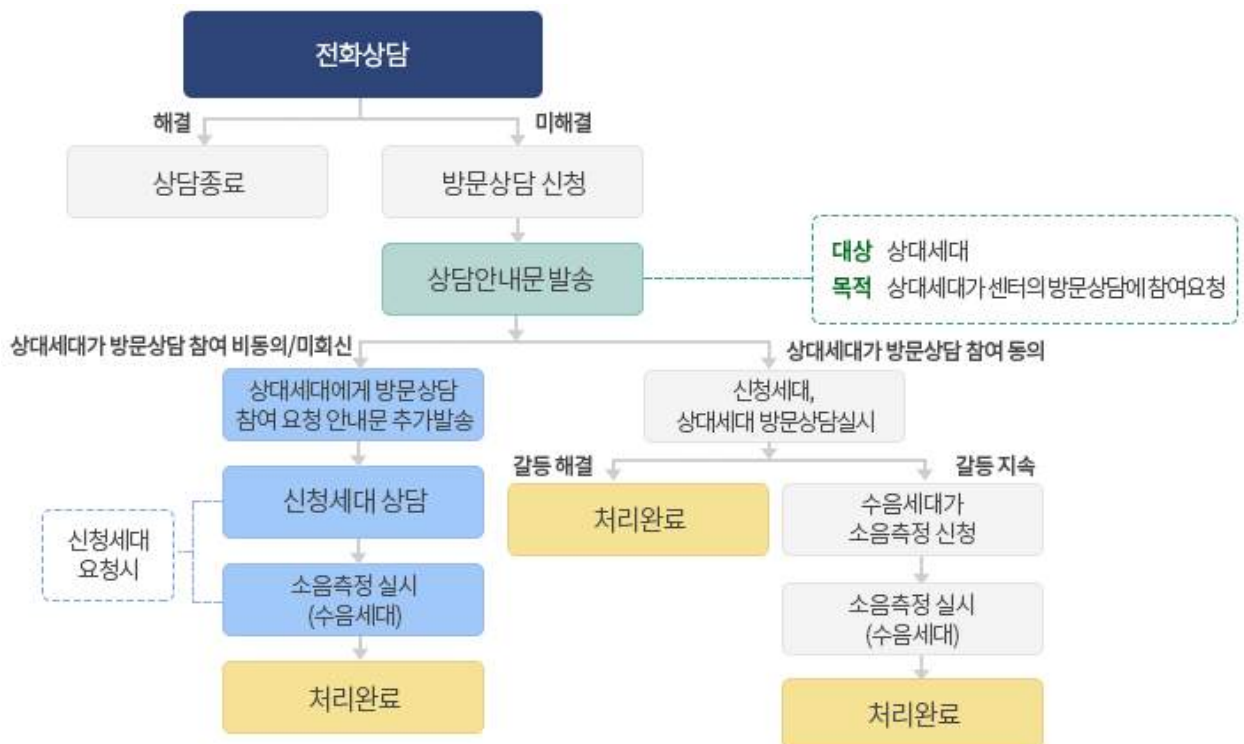
붙임 3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없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붙임 4

충간소음 관리기관 설치 현황

□ 충간소음 상담기관

- 환경부 : 충간소음이웃사이센터(공단, 협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국토부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 지자체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광명시갈등해소지원센터,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등
- 자치기구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기관별 역할

구분	역 할	관련 법령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 환경공단, 보전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충간소음 조정 지원 • 충간소음 측정, 피해사례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실시 	•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피해 관련 분쟁 조정, 피해예방 상담 등 * 중앙(환경부) 및 광역 시·도에 설치 	• 환경분쟁조정법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국토부, 토지주택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통해 충간소음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간소음 피해 사실조사, 심의·조정 * 중앙(국토부) 및 시·군·구에 설치 	•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관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등에게 충간소음 발생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 권고 요청, 확인 조사, 입주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자치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충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운영 	• 공동주택관리법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조례(주택·건축부서)에 충간소음관리 위원회의 설치·운영 권고 등 	• 조례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 등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 	• 경범죄처벌법

1. 층간소음 성가심 평가는 어떻게 한 것인지?

- 한국환경공단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주)환경음향연구소와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했으며,
- 정상청력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용한 실험실에서 층간소음을 모사한 연속충격음과 단발충격음을 들려주면서 성가심 정도를 조사

2. 층간소음기준 중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바뀌지 않는지?

-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는 현 기준값(57dB)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적정 성가심 비율(10%)을 충족
 -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 권장,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 관리
- 공기전달소음은 전체 민원의 1.5% 정도로 비중이 낮아 이번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 추진

3.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은 ?

- '12년부터 '21년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접수한 69,272건 중 층간소음 발생원인으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다음으로 망치질 소리(4.7%),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의한 소리(3.9%), TV 등 가전제품에 의한 소리(2.8%) 등으로 나타남

4.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거나 조정을 받으려면?

-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우선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자치기구(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
- 층간소음 상담 기관으로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1661-2642)와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1600-7004)가 있음
 - * 이웃사이센터에 신청된 민원 중 서울지역은 환경보전협회, 서울 외 지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
- 또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광명시, 평택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웃분쟁조정(해결)센터를 운영하여 상담을 하고 있음
-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으로는 중앙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중앙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5.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후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피해배상 조정 등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10만원 이하 과료(벌칙금)에 처할 수 있음(경찰청)